



“민주노총, 산업전환 위한 산업 포괄 조직화해야”

노조, 전환기 자동차산업 대응 방향 토론회 ... “노동 2025 전략 수립 필요”

금속노조가 6월 24일 오후 노조 회의실에서 ‘전환기 자동차산업과 노동의 대응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노동이 주체로 참여하는 ‘정의로운 산업전환’이 진행돼야 하며, 산업전환이 부품사와 부품사 노동자 희생을 전제하면 안 된다고 역설했다.

정부의 산업전환 정책 방점은 ▲ 수소 관련 인프라 구축 ▲ UAM·PAV 실증사업 및 규제 특례 등 현대차 지원에 쏠려있다.

반면 부품사 관련 정책은 방치 수준이다. 내연기관 전속 부품사 2,800여 개 중 1천 곳에 대해서 전환 지원을 약속했다. 나머지 1,800개 업체는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식이다.

자본은 노동배제 산업전환 계획을 급격하게 쏟아내고 있다. 올해 초 기아자동차가 주주총회를 열고 ‘자동차’를 떼 ‘기아’로 사명을 변경했다. 자동차 제조회사 이미지를 벗고 종합 모빌리티 회사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작년 말 공개한 <2025 전략>을 통해 내연기관 등 기존 사업을 줄이고, 전동화와 수소사업 투자를 10조 4천억 원에서 14조 9천억 원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광규 전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발제에서 “문재인 정부가 재벌 중심의 성장 우선주의라는 프레임을 답습하고 있다”라며 “자동차 페러다임 변화 가속화로 일자리 축소 경향이 나타나려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광규 전 국장은 “고객 중심 노사관계가 확대하면 노동자끼리 분절화, 파편화된다”라며 “최근 화제인 능력주의는 집단노사관계 대신 개별노사관계를 전제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고객중심 노사관계는 고객을 앞세운 ‘자본 주도·이윤중심 신노사협조주의’를 뜻한다.

이광규 전 국장은 “올바른 산업전환을 위해서 노동자가 주체로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 등 대안의 상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노동을 중심으로 교통, 환경, 재벌개혁 등 사회 재구성을 위한 운동으로 확산해야 한다.

이광규 전 국장은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전략·집중적으로 맞불을 놓을 수 있는 ‘노동 2025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안재원 금속노조 노동연구원장은 산업전환기 노동의 대응 방향을 ▲ 의제 확장 ▲ 노동 주도 전환 추진으로 정리했다. ‘의제 확장’은 자본

이 주도하는 친환경차, 미래차 확대 등에 그치지 말고, 한국사회의 질적 변화를 위한 총체적인 전망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미다. ‘노동 주도 전환 추진’은 자본 주도 전환 저지를 넘어서 산업전환 과정에 노동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개입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안재원 노동연구원장은 “현대차는 생산 재조직 수준이 아니라 기업 문화 전체를 바꾸겠다는 그룹 차원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라며 “노조도 이에 걸맞은 경영개입 확대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방향을 제시했다.

안재원 연구원장은 특히 산업과 업종을 뛰어넘는 조직화 전략을 강조했다. 현대차그룹이 종합 모빌리티 회사로 전환을 선포한 이상 금속노조는 모빌리티 벨류 체인 전체를 조직 대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재원 원장은 “배터리는 화석노조, 플랫폼 노동은 서비스연맹이라는 인식을 버리고, 기존 산업 구획에 제한받지 않는 조직화가 필요하다”라면서 “민주노총이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해 산업 전체를 포괄하는 체계적인 조직화 전략을 당장 준비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